

# 이재명 “정치수사에 불체포권리 포기하겠다”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장청구면 제 발로 출석할 것”  
민생·경제 회복 35조 추경 추진  
‘5포정권’…尹정부 실정 비판  
與 “불체포특권 소급적용” 역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



이재명(오른쪽 아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407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듣고 있다.

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도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 발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정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비명(비이재명)계가 ‘사법리스크’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당 전·현직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방탄’ 비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과 ‘정부’를 40번 넘게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했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집권 1년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를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등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대안으로는 새롭게 바뀐 민주당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일본·중국 등 외교 정책에 관해선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

념 중심, 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동하지 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사람들 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연내 처리 약속

### 유가족 간담회… 22일 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연내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유가족분들이 오늘부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며 “6월 국회를 앞두고 특별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당 전체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유가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민주당과 야3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포함해 1주기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민주, 정부에 日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다.

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6일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 한국의 입장과 오염수를 방출 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라는 정부의 브리핑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주장처럼 일본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뚝될 것이고, 결국 일본에 바달라고 하는 길 외에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욱 기자

## 양향자 “양당은 절망만 줘… 신당에 현역 5명 관심”

‘한국의 희망’ 창당을 추진 중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을 향해 “국민 시각에서 보면 희망이 아닌 절망만 주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보수당이 아마추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수당에 부패 세력이라고 했다. 20년간 아마추어와 부패 세력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형국”이라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양당 정치가) 나아진 게 없



다. 공수만 바뀌 가면서 정치를 퇴행시키는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그동안의 여러 과정들이 새로운 정당의 출범과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겠다는 것을 굳어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관심을 가지는 현역 의원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여러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응원도 주신다”며 현역 의원 5명 이상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양 의원은 오는 9월부터는 정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힘,尹 ‘수능 발언’ 논란 조기 진화 총력

### 민심 악화면 내년 총선 악영향 우려 공교육 정상화·사교육 개혁 강조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육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 이후 불거진 ‘쉬운 수능’ 논란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교육개혁의 핵심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개혁’으로 띄우는 등 야권과 진보 교육계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능 관련 지시를 한 이후 ‘쉬운 수능’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오히려 ‘쉬운 수능’을 지시해 교육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공교육 밖 내용을 출제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했지만 논란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민의힘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난이도 조절’이 아닌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개혁이 교육개혁의 핵심’을 내세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부터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임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공정한 수능은 결코 몰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런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길러 문항(변별력 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도·국제고 등은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교육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